

2010년 3월 10일(수) 석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문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작성자	김 종 용 팀장
	자료배포: 에경연 교육홍보팀	전화	031-420-2126

보도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keei.re.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성과 평가 전문가 토론회 개최

(주제 : 이명박 정부 2년 미래 성장기반 구축 : 성과와 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세원)은 2010년 3월 10일(수) 09시 30분부터 엘타워에서 『이명박 정부 2년 미래 성장기반 구축 :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정성과 평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연구회 소속 에너지경제연구원(주관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에서 각각 선정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개 회 식	09:30~ 10:00	◎ 개회사 : 에너지경제연구원 방기열 원장 ◎ 치 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세원 이사장 ◎ 기조 연설 :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
에너지경제 연구원 주제발표 및 토론	10:00~ 11:00	◎ 주제 : 에너지 부문의 녹색성장 전략 및 평가 - 사회자 : 이원우 부원장(에너지경제연구원) - 발표자 : 오진규 본부장(에너지경제연구원) - 토론자(가,나,다 順) : 박태진 원장(지속가능경영원) / 유승직 박사(녹색성장위원회) / 조경엽 실장(한국경제연구원) / 허은영 교수(서울대)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주제발표 및 토론	11:10~ 12:10	◎ 주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 - 사회자 : 박원훈 부원장(한국과학기술한림원) - 발표자 : 장진규 소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토론자 : 곽재원 원장(중앙일보 종합연구원) / 김갑수 교수(KAIST) / 문길주 본부장(한국연구재단) / 정경택 팀장(녹색성장위원회)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주제발표 및 토론	13:30~ 14:30	◎ 주제 : 경제위기극복과 국가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방송통신의 역할 - 사회자 : 이봉호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전 정보통신정책학회장) - 발표자 : 장석권 교수(한양대학교, 정보통신정책학회장) - 토론자 : 박동욱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윤기운 논설위원(매일경제신문) / 초성운 선임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통 연구원 주제발표 및 토론	14:40~ 15:40	◎ 주제 : 교통 물류 부문의 신 성장 동력 : 성과와 과제 - 사회자 : 이영인 교수(서울대학교) - 발표자 : 강연수 센터장(한국교통연구원) - 토론자 : 권오경 교수(인하대학교) / 김우철 과장(국토해양부) / 이의은 교수(명지대학교) / 이충일 편집위원(조선일보)
한국환경· 정책평가 연구원 주제발표 및 토론	15:50~ 16:50	◎ 주제 :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성과와 과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 사회자 : 최상기 부원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발표자 : 김용건 실장 / 김익재 실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토론자 : 강윤영 선임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 / 김정인 교수(중앙대학교) / 서동일 교수(충남대학교) / 이삼희 본부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전의찬 교수(세종대학교)

2010년 3월 10일(수) 석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문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작성자	오인하 책임연구원
	자료배포 : 에경연 교육홍보팀	전화	031-420-2108
보도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keei.re.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 미래성장기반 구축 : 성과와 과제」
제1세션 **“에너지부문의 녹색성장 전략 및 평가”** 주요 발표내용

□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방기열)은 3월 10일(수) 엘타워 그랜드홀(양재동 소재)에서, **“에너지부문의 녹색성장 전략 및 평가”**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함

○ 동 세션은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패러다임인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지난 2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할 것임

□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원우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 제 1세션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오진규 본부장이 ▲ **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정책의 비전 및 체계** ▲ **저탄소·녹색성장 구현 4대 정책비전 관련 정책 동향** ▲ **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 정책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계획

※ 저탄소·녹색성장 구현 4대 정책비전 : ① 에너지 저소비·저탄소 사회 구현, ② 脫 화석에너지화, ③ 그린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④ 에너지 자립·에너지 복지 실현

○ 민·관·학계를 대표하여 박태진 원장(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유승직 박사(녹색성장위원회), 조경엽 실장(한국경제연구원), 허은녕 교수(서울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여할 계획

□ **지난 2년간 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정책의 성과**

○ 정부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심적 국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2월 말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통합적인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완비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녹색기술, 산업, 국토·도시·교통을 포괄한 종합법이자 상위 기본법으로 국제적인 선도입법 사례라 할 수 있음
- 기본법 주요내용으로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제23조),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제39조),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제41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제42조), 온실가스배출량 보고 및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제44조, 제45조),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제46조), 기타 녹색교통·생활·건축물·친환경 농림수산 촉진(제54조 등) 등이 있음
-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을 총괄함
 - 자발적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2009.11)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함
-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그린에너지 산업기반 강화하며 주력산업의 녹색변환을 유도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함
 -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2009년 5월), 제주도에 스마트그리드 통합실증단지 착공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강화 (2007년 1,326억원 -> 2009년 2,115억원)
 - '09년 총 8,495억원을 투입하여 CO₂ 저감 기술 및 친환경 공정·소재 개발 지원하는 등 주력산업의 녹색변환을 적극적으로 유도
-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UAE에 원전플랜트 수출
 - 1400MW급 한국형 원전(APR 1400) 4기 및 준공후 운영지원 포함 총 400억불 규모
 - 원전 수출국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향후 해외 원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초석을 마련
 -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2010.1) 수립을 통해 원자력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지원
-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도입 추진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 50만TOE 이상 사업장(2010년), 5만TOE 이상 사업장(2011년), 2만TOE 이상 사업장(2012년)
- 현재 2만TOE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에 입각한 시범사업을 실시 중
- ※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LG화학,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주요 47개 사업장이 참여

□ 향후 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정책 과제

- 202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감축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배출권 거래제도 및 탄소세 등 시장기구를 활용한 감축수단의 도입
-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선도를 통한 민간부문의 감축 참여 유도
- 국민생활의 녹색화 달성을 위한 대국민 설득, 홍보, 캠페인 강화
-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야 함
 - 단, 에너지 가격 합리화에 따른 에너지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의 차별화 또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같은 직접보조를 병행
-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비중 확대 및 수출산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에 주력해야 함
 - 원전확대에 따른 국민 수용성 증대 및 핵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모색
 - 수출산업화를 위해 원전설계코드, 원전로냉각펌프, 원전제어장비 등 핵심원천기술확보에 주력
-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계통연계 및 에너지 수급체계 개선을 위해 지능형전력망 조기 구축함으로써 분산형 전원체계로 전환해나가야 함
 - 전기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녹색건물의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 첨단계량시스템 등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 인프라

조성이 요구

- 실시간요금제 도입, 거래제도 개선 등 법적 제도적 여건 마련도 병행
- 풍력, 바이오, 폐기물 등 투자 대비 에너지 공급효과가 큰 신재생에너지원을 집중 육성해야 함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성장가능성이 크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계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야 함

156-714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27층
Tel. 02-3284-1800, Fax. 02-849-8016, <http://www.stepi.re.kr>

‘이명박 정부 2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3월 10일(수)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이명박 정부 2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성과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속 5개 연구기관이 「이명박 정부 2년 미래성장기반 구축 : 성과와 과제」의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세션 2>에서 장진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장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성과와 과제’를 발표하고, 박원훈 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을 사회로 곽재원 중앙일보 종합연구원 원장, 김갑수 KAIST 교수, 문길주 한국연구재단 본부장, 정경택 녹색성장위원회 국장이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STEPI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올바른 과학기술정책 방향 설정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공공부문의 선도적 정책수립·추진을 통한 체계적 녹색기술개발 등의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한다.

■ 첨부 : 발표자료 요약본 1부. 끝.

■ 보도자료 관련 문의

장진규 신성장동력센터 소장 02-3284-1868 jgjang@stepi.re.kr

나성연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93 syna@stepi.re.kr (010-2911-1213)

156-714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27층
Tel. 02-3284-1800, Fax. 02-849-8016, <http://www.steipi.re.kr>

<첨부> 발표내용 요약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장진규(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성장동력센터 소장)

□ 추진 배경

- 선진국들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구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박차

이명박 대통령은 '08년도 8.15 경축사에서 "적극적인 녹색기술개발투자를 통해 핵심 녹색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성장동력화 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도 해결한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제시

□ 주요 내용

- 최근의 경기침체에 대응한 단기적 대응방안인 동시에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 사업' 시행('09. 1)
- 녹색과학기술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환경지속성 지수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 대책(안)' 수립('09.1)
- 앞으로 3년 이후 단계적으로 가시화되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수립('09. 5)
- 녹색기술개발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적 개발체계 구축,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09. 7)

□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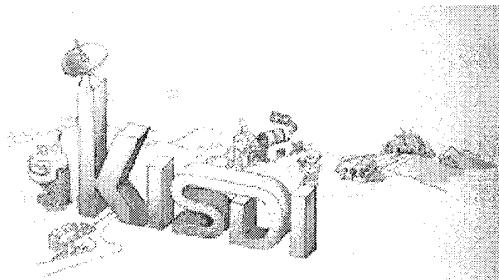
- 부처별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계획은 지식경제부(45.8%, 8,948억원), 교육과학기술부(25.3%, 4,944억원), 국토해양부(11.4%, 2,223억원), 환경부(8.5%, 1,654억원) 순

156-714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27층
Tel. 02-3284-1800, Fax. 02-849-8016, <http://www.stepi.re.kr>

- 지경부는 그린 IT,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주력, 교과부는 대학·출연(연)의 녹색기술원천기술개발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 강화에 주력, 국토부는 생태공간 조성, 지능형 교통·물류 기술개발 중심으로 투자계획 수립, 환경부는 폐기물저감·재활용 기술 등 사후처리 기술개발에 주력

□ 향후 과제

- 정부의 올바른 과학기술정책 방향 설정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공공부문의 선도적 과학기술정책 수립·추진을 통한 체계적 녹색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실용화 제고 방안 모색
- 구체적으로, ①녹색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조정 필요, ②해당 녹색기술의 상용화 등 경제적 기회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투자 추진, ③녹색시장 창출, ④민간 기업들이 녹색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⑤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 절약 등급제 등 녹색기술 인증제도 확산 및 탄소배출 라벨제도의 광범위한 도입·시행 필요



KISDI 보도자료

연구조정실 정책홍보팀
Tel. 02-570-4421, 4425

■ 배포일자 : 2010. 3. 9 (화) 15:00

■ 보도일자 : 2010. 3. 10 (수) 석간

「이명박 정부 2년 미래성장기반 구축 : 성과와 과제」 토론회 3월 10일 개최

‘경제위기극복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방송통신의 역할’을 주제로

- 행사명 : 「이명박 정부 2년 미래성장기반 구축 : 성과와 과제」
- 목 적 : 이명박 정부 2년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일 시 : 2010년 3월 10일(수) 09:30~17:00
- 장 소 : 양재동 엘타워 그랜드홀(7층)
- 참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주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3세션 주요 발표내용>

- ▲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미래지향적 역할과 발전방향
- ▲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성장, 구조적 변화 및 혁신 추구
- ▲ 급변하는 세계시장 경쟁구도에서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미래지향적 역할 재정립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OECD 국가 중 신속하게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성과를 달성하면서 출범 2주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현재 세계적인 자원위기와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이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의 성장기반 구축은 출범 3년차를 맞는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3월 10일(수) 양재동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통신분야 국정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이명박 정부 2년 미래성장기반 구축 :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경제위기극복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방송통신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세션을 맡았으며, 민·관·학·언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을 역임한 이봉호 서울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 제3세션에서는 現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장석권 교수가 ▲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미래지향적 역할과 발전방향 ▲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성장, 구조적 변화 및 혁신 추구 ▲ 급변하는 세계시장 경쟁구도에서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미래지향적 역할 재정립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박동욱 연구위원,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조성운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의 : 연구조정실 이춘성 연구원(02-570-4015)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0. 3. 9.(화) / 총 2매
담당 부서	신성장동력 센터	담당자	• 강연수 신성장동력 센터장 ☎ (031)910-3184, ykang@koti.re.kr
보 도 일 시		2010년 3월 10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부문의 신성장동력』 “성과와 과제”			

- 한국교통연구원(원장 황기연)은 3월 10일(수) 엘타워 그랜드홀(양재동 소재)에서 『이명박정부 2년, 교통물류부문의 신성장동력 :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본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그간 교통부문의 3대 분야 9개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및 분류된 연구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향후 “도시구조 체계 개편”, “에너지 교통체계”, “미래첨단교통운영관리체계” 등 3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국정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기술개발 및 국가교통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할 예정이다.
- 녹색기술산업으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으로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기차 인프라, 철도, 자전거체계 구축 등으로 녹색교통망, 그린카·청정에너지보급, 쾌적한 녹색생활공간 조성을 하여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5조4천억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와 고속철도로 인해 경부선 축의 철도분담률이 38.9%에서 60.9%로 크게 증가하였고, 자전거 급행도로를 구축함으로써 10Km이내 구간에서 20%의 승용차통행이 자전거로 전환시

연가 약 7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되었다.

□ 첨단융합산업은 친환경적인 교통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기능의 극대화를 이루었다.

○ u-Transportation, 연계/환승 시스템, 안전시스템, 지능형 공항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 물류비용과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교통환경비용 등 연간 약 200조원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의 10%이상(약 20조원)을 절감하는 효과로 분석되었다.

□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물류산업과 항공산업의 전략적인 접근으로 국가적인 핵심전략산업으로 국익을 제고하였다.

○ 통적 물류기능을 확장한 종합서비스의 제공, 녹색물류, 물류보안 등 화주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배가되었으며, 항공 관련된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정비업(MRO), 항공기 임대리스업 등 항공관련 산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 금번 전문가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추진되는 교통물류부문의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구축 전략이며 향후 구체화된 전략을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 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 본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교통관련 5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교통물류부문의 신성장동력 : 성과와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방청자들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은 본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도자료	보도일자	매수
		2010년 3월 10일 석간	3매
	담당부서	기후변화연구실	김용건 박사 02-380-7637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성과와 과제”

- ◇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수립 및 발표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 마련 본격화
- ◇ 부처 간 이견 충돌 시 규제 지연과 혼란 및 피규제자 부담 가중 우려

- 2008~2009년간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수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수립 및 발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특히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수립 및 발표는 국내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본격화를 촉발하는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되며, 또한 대외적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는 타 선진국의 목표와 비교하더라도 충분한 상응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의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본격화·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다만, 현재 입법예고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안에는 필요 이상의 규제적 성격과 함께, 온실가스 규제 관련 주무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피규제자의 혼란과 부담 및 관련부처 간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 현재 시행령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선순위 없이 동시에 세부 공정별로 규정하고 있어 목표간 상충과 정부·피규제기관 모두의 혼란과 부담 가중이 예상됨.

· 예를 들어 현재 시행령안 제29조는 사업체가 주요 생산 ‘공정’별로 에너지 배출량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이행방법을 제출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미달성시 개선명령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의 규제이며, 더욱이 세부적인 에너지 사용까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피규제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 시행령안은 온실가스 관련 주관부처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규정한 경우가 30여 곳에 달하여, 부처 간 이견 충돌 시 규제 지연과 혼란 및 피규제자 부담 가중이 우려됨.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확정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올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연구과제 추진이 필요함.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계 및 달성 전략 수립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정책설계
- 부처간 업무분담체계 조정
-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보고 인프라 구축
-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 및 의견수렴
- 시행령(안)상의 에너지 사용규제 합리화
-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국제협상 대응

○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연구과제 추진이 필요함.

- 저탄소 녹색 생활양식 확산을 위한 정책 수단의 개발·추진
- 배출권 거래제도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통합·조정
- 탄소세 도입 방향 및 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 방안 설계
- 국내 배출권 시장과 해외 시장과의 연계 정책
- 배출권 교역 및 탄소세의 WTO상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 국제 탄소시장 진출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수립·이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도자료	보도일자 2010년 3월 10일 석간	매수 4매
	담당부서	물순환연구실	김익재 박사
			02-380-7678

“4대강 살리기는 물관리 선진화의 전환점이 되어야 ”

◇ 지난 1년간의 사업성과 확인과 성공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4가지 과제 제시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범정부차원의 하천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으로 통합적 물관리로의 전환점이며 치수·이수·수질·생태와 문화·지역개발 등 각 부문별 다양한 기대효과가 전망됨.
 - 그동안 우리나라 상당량의 하천과 수변은 소하천에서 대하천에 이르기 까지 이용과 소비의 대상으로, 정비(maintenance) 정책을 위주로 시행되어 왔음.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비를 넘어선 범정부차원의 하천관리 종합계획, 즉 통합적 관리(integrated management)의 전환점으로 조명될 수 있음.
- 본 토론회에서는 지난 1년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성공적 4대강 살리기를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시함.
 - 사업의 단계별 진척, 주요 성과, 기대효과 분석
 - 공사 관리, 물관리, 수질 및 생태, 하천관리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를 제시

□ 4대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 성과

1. 환경영향평가의 완료

-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 본안 평가 및 환경평가단 자문회의를 거쳐 '09.11.6에 완료되었음.

2. 수질오염 대응시스템 구축

- 사업과정에서 하천의 수질오염사고 예방·감시·대응을 위해 '수질오염방재센터(환경공단)'가 설립되고 취·정수장의 수질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수질사고 위기관리 시스템(한국수자원공사)'이 개발되었음.

3. 하천 생태·관광정보 구축

- 4대강 주변에 분포하는 생태자원을 취합·선별한 '생태관광자원50選'과 권역별로 생태자원을 연결한 생태관광테마인 '생태관광탐방코스10選' 등 하천의 생태·관광정보가 구축되었음.

4. 국제 사회의 주목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유엔환경계획(UNEP)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사회에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대효과(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2009)

1. 홍수·가뭄 피해 저감

- 향후 13억 m^3 의 용수 확보량이 증대되어 장래 물부족에 대처하고, 홍수 조절능력이 증대되어 100~200년 빈도의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치수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2.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의 조기 집행, 방류수 기준 강화 등을 통해 4

대강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생태습지 조성계획을 통해 수생태계 복원이 기대됨.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34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약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됨.

□ 성공적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4가지 과제

1. 공사과정의 환경영향·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 강화

- 수변 지하수 관리, 하천 퇴적물 및 준설물질의 관리와 활용·처분 계획, 수질오염 사고, 민감 생물종 보호 등 마스터플랜 계획을 하천현장에서 추진하면서 발생가능한 일시적 환경영향을 사전 예방·관리하는 노력이 필요

2.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관리 선진화의 전환점이 되어야 함

- 사업 완료 후 배양되는 통합 물관리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관련 제도 정비 및 부처간 협력기능을 강화해야 함
- 4대강 사업을 기점으로 선진화되는 물관리 정책은 현행 이수·치수·환경·생태·재난방지 등의 관련 정책과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는 물안보 (water security)적 체계를 기반해야 함

3.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복원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은 4대강 사업이 성패를 가늠하고 유지관리에 핵심적 영역임
- 마스터플랜의 수질개선 사업에 비점오염원 저감·관리, 특히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방지가 필수적이며, 수생태 복원, 저영향개발(LID) 기법 등 수질·수생태 계획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영되어야 함

4. 극대 기후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확대되어야 함.

- 준설과 제방증고 등의 종적 치수대책은 극대 기후 등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지류하천 살리기와 연계된 본류의 횡적 하천공간 확보 방안(제방 후퇴, 강변저류지·배후습지 조성, 구하도 복원, 홍수터 확보 등) 계획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함